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,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2.2.(월) 11:00 < 2.3.(화) 조간 > 배포 2026. 2. 2.(월)

게임체인저 소부장 생태계 선점을 위해 수요-공급기업 간 대형 협력 추진한다

- 신규 소부장 협력모델 공고 ❶생태계완성형 ❷지역주도형 유형 신설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2월 3일(화) 소부장 협력모델 후보 모집을 위한 공고를 개시하였다. 산업부는 금번 공고를 통해 신설 유형*인 ❶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과 ❷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.

* (근거)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('25.10. 소부장경쟁력강화委 의결)

소부장 협력모델(이하 협력모델)은 '19년 日 수출규제 이후 추진된 소부장 산업 대표 제도로서, 출범 이후 74건의 수요-공급기업 간 협력을 발굴하고 지원해왔다. 그 결과, 희토류 영구자석, 이차전지 파우치 등 외산에 절대 의존하던 품목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, 국내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양산 공장 설립도 이끌어내었다. 다만, 최근 국가대항전*으로 치닫는 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'모방·추격', '단일 품목' 중심 지원을 '차세대 품목 선점', '생태계 단위 지원'으로까지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다.

* (日)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위해 정부 및 수요기업 주도로 반도체社(라피더스) 설립

【신설 유형 ❶】 게임체인저 품목의 전후방 소부장 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을 신설한다. 최종 수요기업의 진두지휘 하에 게임체인저 품목과 연관된 소부장 기업 전체가 기술을 혁신한다.

본 협력모델에서 수요기업은 과제 참여자 역할을 넘어서 소부장 생태계의 설계자(architect) 역할로 활약*한다. 정부는 수요기업에 도전적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(R&D총괄)을 부여하는 한편, △R&D 참여기업 자율 선택·변경 권한 △대형 R&D(연 60억 내외) 자금 및 정책금융 등을 제공한다.

* (관련 정책) 「산업R&D 혁신방안('26.1.28)」 수요 앵커기업 주도 '산업 도약 기술 프로젝트'

【신설 유형 ❷】 지역을 구심점으로 소부장 협력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을 신설한다. 본 유형은 소부장 특화단지 전용 지원 유형으로서, 지역 기업의 협력 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▲단일 지역형과 ▲지역 간 협력형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한다.

첫째, 단일 지역형 모델의 경우 특화단지 내 공장 신설 및 증축 투자의 신속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형이다. 지방정부와 지역 내 앵커기업이 소부장 기업의 설비 투자계획에 대한 패키지 지원*을 확약한 후, 중앙정부는 확약 내용 및 생태계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협력모델로 선정한다. 이를 통해 지역 내 수요-공급기업 간 R&D, 투자자금에 대한 정책금융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.

* (지방정부) 부지(임대료 등), 정주여건 (앵커기업) 구매확약, 실증 등 (지역혁신기관(TP등)) 연구장비활용

둘째, 지역 간 협력형은 서로 다른 특화단지*에 소재하는 수요-공급기업 간의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유형이다. 서로 특장점을 가진 지역의 생태계를 연결하여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, 단일 지역 내 성과가 지역 외·권역 외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* (신청 주체) 소부장 특화단지,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(소부장 특화단지는 필수 포함)

금번 공고의 마감일은 4월 9일(목) 이며,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(www.motir.go.kr)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(www.keit.or.kr)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산업부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“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도 변혁적으로 재편 중인 시점으로, 개별 품목·소수 기업 간 협력을 넘는 생태계 단위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.” 라고 언급하였으며, “또한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, 지역이 소부장 생태계 구축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.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공급망정책관 소재부품장비개발과	책임자	과 장	김정두 (044-203-4920)
		담당자	사무관	안호연 (044-203-492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소부장 협력모델 신설 유형 개요

□ **(경과)** 그간 소부장 협력모델은 **소부장 기술 자립** 및 **공급망 안정성** 확보를 핵심 목표로 추진

○ 수요기업의 실증, 구매 등 참여로 **신속 사업화 및 설비 확보 등 성과**

□ **(한계) 모방·추격형 R&D 중심**으로 추진되어 **차세대 품목 및 기술 선점형 협력**이 부족하였고, 수요기업은 수동적 역할에 국한

○ 또한, 발굴, 기획, 선정 등 절차에서 **지방정부 역할은 부재**

☞ ❶**게임체인저 품목의 수요기업**(앵커기업)이 소부장 **생태계를 설계**하는 **「생태계형 협력모델**(가칭 ACE 프로젝트)」 **신설**

☞ ❷**지역이 중심**이 되어, **지역을 위한** 소부장 협력을 발굴 및 기획하는 **「지역주도형 협력모델」 유형 신설**

< 협력모델 유형 개요 >

유 형		사업 내용	지원규모(연간)
일반형 협력모델		• 소부장 수요-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및 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 지원	**40억원 내외**
신설 **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** (가칭 ACE 프로젝트)		• 게임체인저 품목의 최종 수요기업이 소부장 생태계를 설계하는 대형 협력	**60억원 내외**
신설 **지역주도형 협력모델**	**단일지역형**	• 단지 내 소부장 기업 공장설립을 ▲중앙* ▲지방** ▲앵커기업***이 합동으로 지원 * R&D, 금융 등 ** 정주여건 등 *** 실증, 구매 등	**40억원 내외**
	지역 간 협력형	• 다수 특화단지의 앵커, 협력기업이 신규 품목을 개발하고 사업화까지 추진	

□ **(선정시 혜택)** 협력모델에 대해 **범부처 합동 패키지** 지원

○ **(기술)** 수요-공급 공동 R&D, 양산성능평가 등 **사업화 지원**

○ **(규제특례)** 주 52시간 제도 완화 적용(특별연장근로인가),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**규제 특례**

○ **(세제·금융)** 해외 기업 M&A 시 세제* 지원, 정책금융 등

* 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을 보유한 해외 기업 M&A 시 법인세 세제 혜택 부여

붙임2 **소부장 협력모델 개요**

1. 개 요

□ **(추진 배경)** 日수출규제('19.7월) 이후, **핵심 소부장 자립을** 통해 **소부장 경쟁력을 강화**하고 **공급망 안정을 달성**하기 위해 추진('19.11월 최초 승인)

* 「소재·부품·장비 특별법 제49조(협력모델의 발굴), 제50조(협력모델에 대한 지원)

□ **(지원 방식)** 수요-공급기업 간 공동 R&D, 구매 협력 등 협력체계를 '소부장 협력모델'로 승인하고, **범부처 패키지 지원 제공***

* R&D(산업부), 정책자금(금융위), 세제(기재부), 인력(과기부), 규제 특례(고용부, 환경부 등) 등

2. 추진 현황 : 총 74건 협력모델 승인 완료(산업부 46건, 중기부 28건)

□ **(절 차)** ①**기업의 신청**을 통해 **신규 협력모델을 발굴**하고 ②소부장 **"전문위원회~경쟁력위원회*" 順**으로 심의 → 승인

* (위원장) 경제부총리 (부위원장) 산업부장관 (위원) 과기부, 중기부, 노동부 장관 등

□ **(현 황)** 총 46건 협력모델 대상 R&D 5,838억원, 非R&D 196건 지원

* 참고 : 중기부 협력모델('20~24) 28건 포함 시 71건, 약 7,000억원 지원

<주요 성과 사례>

협력모델	핵심 성과
 **희토류 영구자석**	▸ **(기술자립) 전략 대외 의존** 구동 모터용 영구자석 **국내 최초 개발** ▸ **(설비확충) 국내 최초 희토(네오디뮴) 영구자석 생산공장** 구축, **1,000톤/年 생산**
 **이차전지용 파우치**	▸ **(기술자립) 전량 對日 수입 의존** 전기차 배터리 파우치 자립화 ▸ **(시장점유)** '23년경 국내 시장 20% 점유 → **'26년까지 50%로 확대 추진**
 **배터리 분리막 코팅용 분말**	▸ **(기술자립) 전량 對日 수입 의존** 산화 알루미늄 분말 제조 및 양산 기술 확보 ▸ **(설비확충)** 산화 알루미늄 분말 **8천t/年 생산 가능 설비(국내수요 50%이상 충당) 구축**